

비상경제본부 회의 결
경제·산업경쟁력강화
관계장관회의
26-22-2 (공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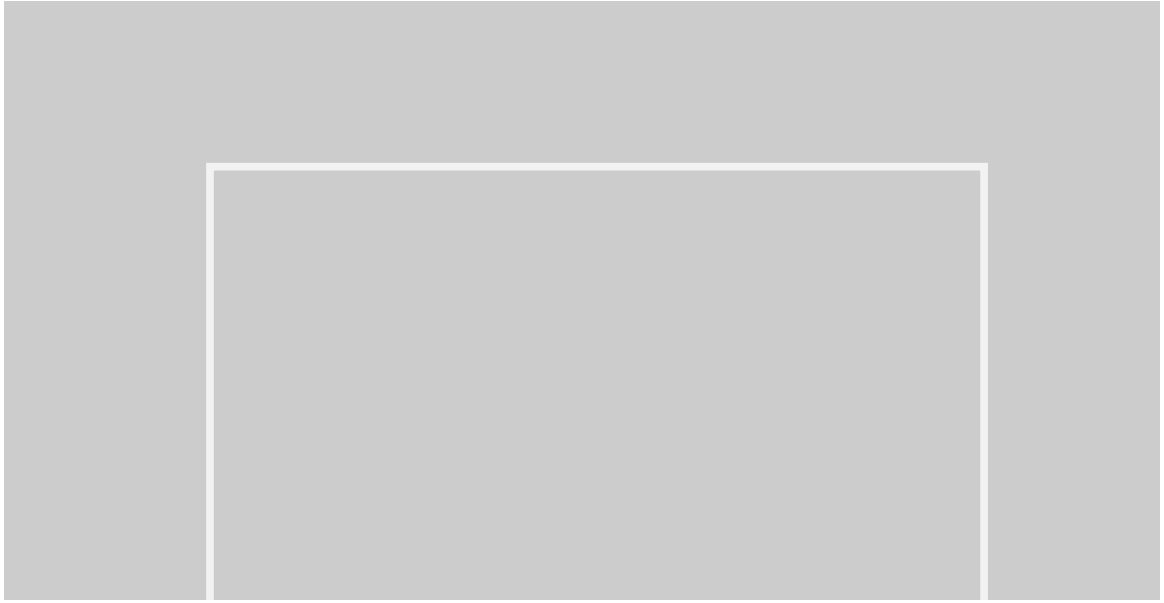
위기기업의 성장·회복 촉진을 위한
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

2026. 7. 8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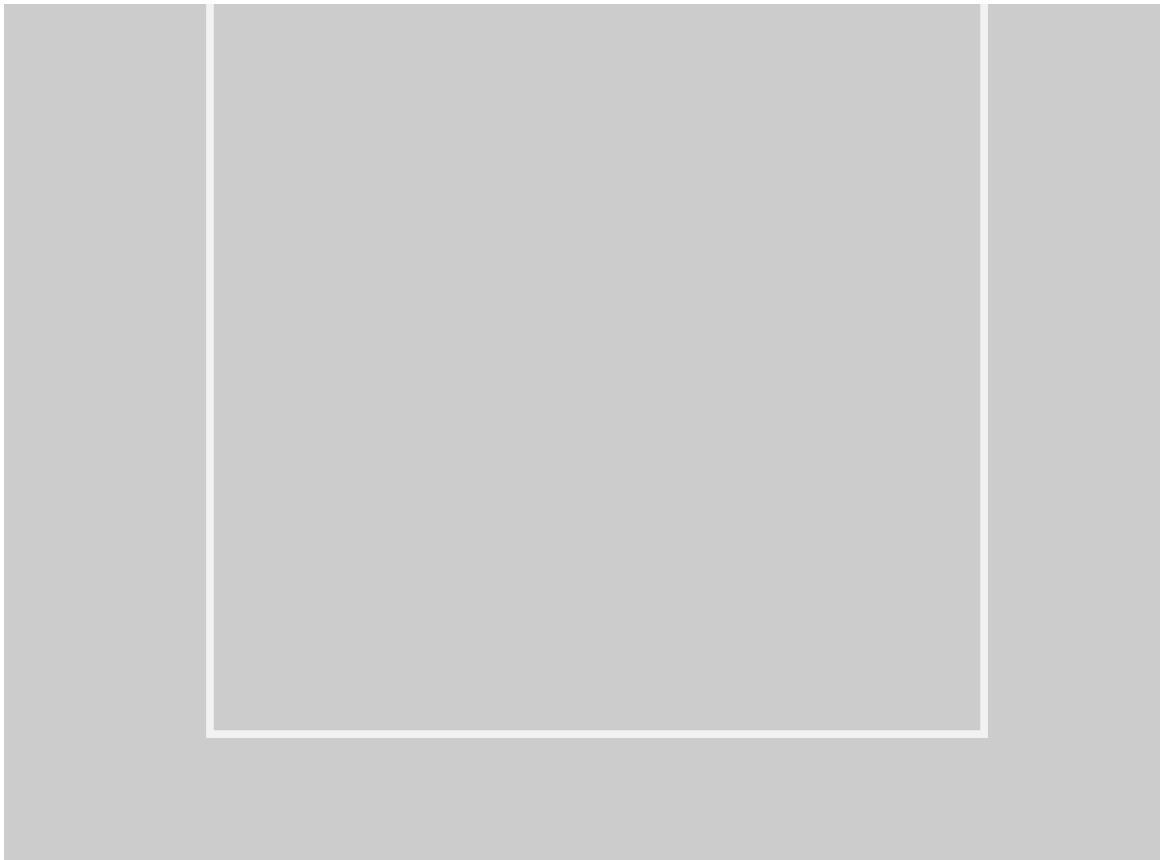
관 계 부 처 합 동

순 서

I . 추진배경	1
II . 현황 및 문제점	2
1. 중소기업 위기상황	2
2. 재도약 정책현황	3
III . 추진방향 및 전략	6
IV . 세부 추진과제	7
1. 위기 조기경보 및 위기상황 종합진단 등 선제적 대응 ..	7
2. 재무 위기기업 구조개선 및 회생 지원 강화	10
3. 성장 위기기업 유망사업 전환 촉진 및 성공 지원	12
4. 재도약을 위한 제도·인프라 뒷받침	17
V . 향후 추진일정	20



요약



중소기업 재도약 지원 대책

1. 추진배경

□ 최근 중소기업 성장 둔화, 한계기업 증가 등 위기는 심화

* 한계 중소기업 비중(% , KODATA): ('20) 6.5 → ('21) 7.0 → ('22) 7.9 → ('23) 8.0 → ('24) 8.8

- '24년 기준 11만개 법인 중소기업 중 위기징후 기업은 50%(5.5만개), 다만, 한계기업의 45.0%는 매출 증가 기업으로 상당수 정상화 가능

⇒ 위기(징후)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여 경영 정상화 및 성장 회복에 정책 역량을 집중

2. 재도약 정책현황

□ 정책 개요

- 기업이 성장 정체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업종추가·업종변경 등 사업전환 지원('06~)
- 선제적 구조개선, 희생 등 재무위기 중소기업의 정상화 지원('15~)

□ 문제점 및 개선방향

- **(대응체계)** 성장정체, 재무관리 위기 상황에 직면한 일부 중소기업 (6만개)의 사후적 대응 및 지원센터(사업전환, 구조개선)의 분절적 운영

⇒ 위기징후 조기 탐색·알림 등 선제 대응 및 통합 지원체계 구축

- **(구조개선)** 일시적 재무 위기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시중은행과 함께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, 기업 채무부담 완화 지원책 부재

⇒ 금융기관의 재무 위기기업 채무조정 유도 및 유동성 지원 강화

- **(사업전환)** 성장 전환과 지속화를 위한 지원수단 및 전환분야 집중이 부족하고, 개별기업 전환 대비 대·중소 공동사업전환이 미미

⇒ 성장유망분야 전환, 대중소협력 공동전환 등 적극적 사업전환 촉진

【참고】 위기 대응 및 재도약 지원체계

- 중소기업 위기 상황을 조기에 포착하여 알려주고,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선별·지원하는 재도약 지원체계 고도화
 - ① 선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AI 기반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구축 추진
 - ② 지역 재도약지원센터 진단·검증을 통해 위기 유형별 맞춤 지원



3. 주요 추진과제

【전략 1】 위기 조기경보 및 위기상황 종합진단 등 선제적 대응

①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구축 추진

- **(구축)** 25만개 전체 중소기업의 위험징후 사전 포착 및 선제적 알람을 위한 AI 기반 ‘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’ 구축 추진
- **(운영)** 위기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, 산업·지역·이슈별 위기를 분석하여 위기징후 기업에 사전 경보알림 및 맞춤 지원

② 위기상황 종합 진단 및 맞춤 지원

- **(진단검증)** 위기 경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진단 및 검증을 통해 정상화·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유형별 맞춤 사업 지원
- **(맞춤지원)** 진단결과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성장 전환을 위한 구조개선 또는 사업전환을 컨설팅부터 융자, R&D 등 후속 지원

【전략 2】 재무 위기기업 구조개선 및 회생 지원 강화

① 구조개선 대상 선별 및 민관협력 지원 강화

- **(선별강화)** 위기경보알림시스템으로 포착한 재무위기 기업 중 지원대상 선별을 위해 ‘정상화 요인’을 반영한 심사기준 고도화
- **(채무조정)** 금융권 대상 ‘상생금융지수’ 평가 항목 내 ‘중소기업 채무조정 비중’을 신설하여 상생금융 참여 유도

② 회생절차 진입 전·후 지원 확대

- **(진입 전)** 법원과 비공개 방식인 회생 전 자율구조조정 제도*(Pre-ARS) 이용 활성화 및 채무조정 협상 컨설팅 지원으로 성공률 제고

* 기업이 공개되는 회생절차 신청 전 법원의 비공개 조정절차를 이용해 주요 채권자들과 협상하는 예방적 자율구조조정

- **(진입 후)** 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을 낙인효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생인가 기업(이행계획 정상추진) 까지 확대하여 정상화 도모

【전략 3】 성장 위기기업 유망사업 전환 촉진 및 성공 지원

1 유망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촉진

- 현행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 및 지역주력산업 분야를 추가 우대하여 유망 신사업으로 전환 유도(59% → 70% ↑)

2 사업전환 성공 5종 정책패키지 지원

- 성공적 사업전환을 위해 ①기술 → ②인력 → ③제조 → ④금융 → ⑤판로 등 전환 실행 단계별 수요에 맞춘 이어달리기식 지원

3 대·중소 동반 사업전환 활성화

- 공급망 상위기업(대·중견)의 신사업 진출계획과 연계하여 전·후방 가치사슬이 함께 움직이는 공동사업전환 추진
- 대기업과 함께 전환에 참여할 (예비)협력사를 발굴·매칭하여, 공동전환 계획수립부터 이행까지 일괄 지원

4 이행 성과별 차등 지원 및 우수기업 성장 가속화

- 사업전환 계획의 이행 성공·실패 관리방식에서 연차별 목표 달성도,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'마일스톤' 방식으로 개편
- 마일스톤 성과 달성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'사업전환 선도기업'을 선정(연 30개 내외)하여 점프업 프로그램과 연계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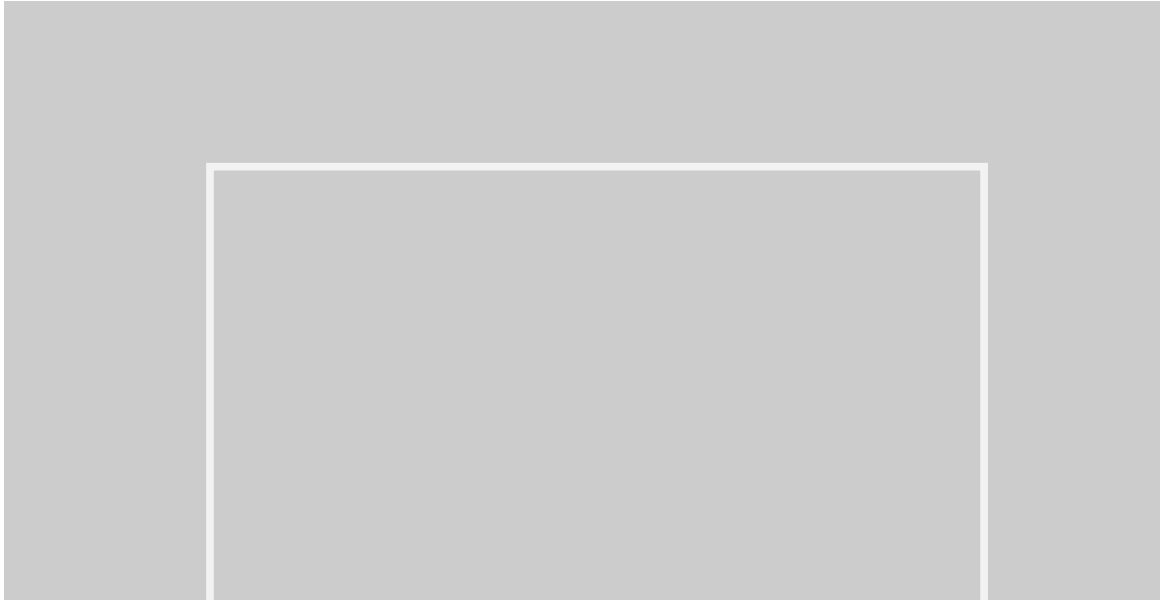
【전략 4】 제도약을 위한 제도·인프라 뒷받침

1 사업전환 유형 및 범위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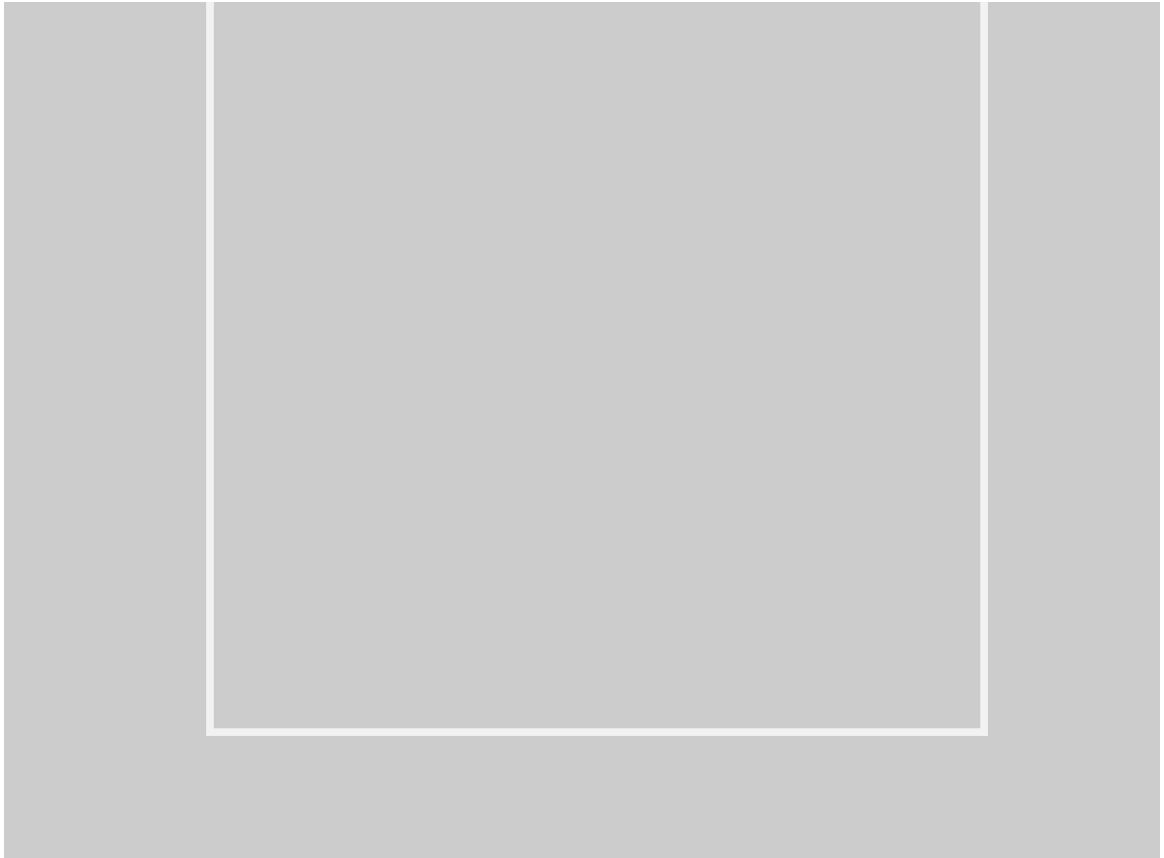
- 기업의 업종 추가·전환 외 분사·조인트벤처, 인수합병 등을 통한 사업전환 방식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

2 규제 완화 및 인수합병 등 활성화

- 사업전환기업에 일하는 전문 외국인력의 체류기간 확대와 지방 사업장 신·증설 시 지방투자보조금 수혜 요건 완화 추진
- 민간 협업 M&A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전환형 M&A를 활성화



PH



I. 추진배경

- **(상황)** 최근 중소기업 성장은 저하, 한계기업 증가 등 위기는 심화
 - * 전년비 매출증가율 중위값(% KODATA): ('20) -1.03 → ('21) 8.02 → ('22) 7.64 → ('23) 0.97 → ('24) **0.94**
 - ** 한계중소기업 비중(% KODATA): ('20) 6.5 → ('21) 7.0 → ('22) 7.9 → ('23) 8.0 → ('24) **8.8**
↳ (정의) 3년 연속으로 이자보상배율(영업이익/이자비용)이 1 미만인 기업
- **(성장)** 매출 고성장기업이 감소로 전환, 중소기업 수익성도 하락세
 - * 3년 평균 매출증가율 20% 이상 기업 비중(% KODATA): ('22) 19.6 → ('23) 20.4 → ('24) **17.3**
 - ** 매출액 영업이익률(% 한은): ('22) 中 1.8 < 大 4.9 → ('23) -1.0 < 3.0 → ('24) **-2.1 < 5.8**
- **(위기)** '장기 한계기업'이 지속 증가하는 등 위기는 고착화되고, 파산·회생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
 - * 한계기업 中 5년 연속 기업 비중(% KODATA): ('22) 14.2 → ('23) 17.9 → ('24) **22.6**
 - ** 산업 내 한계기업 1%p 늘면 정상기업의 투자·고용 증가율 0.14~0.18%p 하락(한은, '26)
 - *** 법인 파산/회생 신청(건, 법원): ('21) 955/ 717 → ('23) 1,657/ 1,024 → ('25) **2,282/ 1,321**
- **(원인)** 글로벌 산업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과 자체 혁신동력 부족 등 내부요인이 복합 작용
 - * 중소기업이 성장 정체에 빠지는 원인(산업연, '21): **시장요인(65%) > 기업요인(35%)**
 - ** 제조기업 10곳 중 8곳은 레드오션(포화 54.5%, 감소 27.8%)에 진입(대한상의, '25)
- **(외부)** 디지털 및 인공지능 대전환(DX, AX), 글로벌 공급망(GVC) 재편, 탄소중립,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경영환경의 급변
- **(내부)** 기술변화(DX, AX 등)에 대응한 혁신역량 부족, 고금리·고환율에 따른 재무압박, 내부자원(자금, 인력 등)의 한계 등으로 체질 약화
- **(방향)** 성장 잠재력이 있는 위기(징후)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회복 및 재도약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
 - * '24년 한계 중소기업 중 45%가 매출 성장기업이며, 이중 고성장기업은 13% 정도

⇒ 한계기업의 수명 연장이 아닌 중소기업 회복과 재도약 생태계 구축

II. 현황 및 문제점

1. 중소기업 위기상황

- **(위기현황)** 최근 중소기업은 성장·수익성 저하로 'U자'형 위기 양상, 대출 연체율* 상승과 대외여건 불확실성 지속 시 위기 심화 예상

* 中企 금융업권 연체율(% 한은): ('20.1Q) 1.06 → ('22.1Q) 0.81 → ('24.1Q) 2.72 → ('26.1Q) 2.8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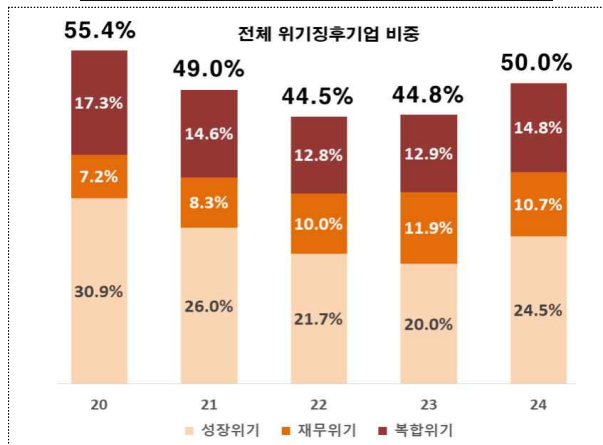
- '24년 기준, 11만개 법인 중소기업 중 위기징후 기업은 50%(5.5만개)

- 유형별로는 성장위기 39.3%, 재무위기 25.5%, 복합위기 14.8%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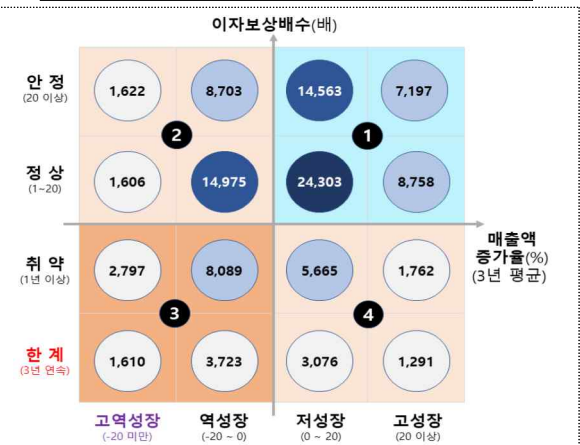
* ①<성장위기> 역성장(3년 평균 매출액증가율 0 미만) / ②<재무위기> 이자보상배수(영업이익/이자비용) 1 미만 / ③<복합위기> 성장위기·재무위기 동시 발생

- 그럼에도 한계기업(9.7천개, 전체 8.8%)의 45.0%는 매출 증가기업으로 확인되어 선별할 기업도 분명 존재

최근 5년간 위키유형별 비중 추이



'24년 위기징후 중소기업 분포(개사)



※ 분석대상: 업력 7년 초과 법인 중소기업 109,740개사(전산업, 소상공인 제외)

- 정상경영(①분면): 5.5만개(50.0%)
- 성장위기(②분면): 2.7만개(24.5%)
- 재무위기(④분면): 1.2만개(10.7%)
- 복합위기(③분면): 1.6만개(14.8%)

- **(위기탈출)** 한계기업의 정상화 요인 분석결과* 수익·생산성 등 재무 개선을 통한 경험횟수 최소화 외 고용 증가, 임금 상향 등 비재무적 지표도 성장회복의 핵심 요소

* 한계기업 중 정상화 기업 요인분석(KODATA): '10~'25년간 업력 5년 이상 법인기업 27.7만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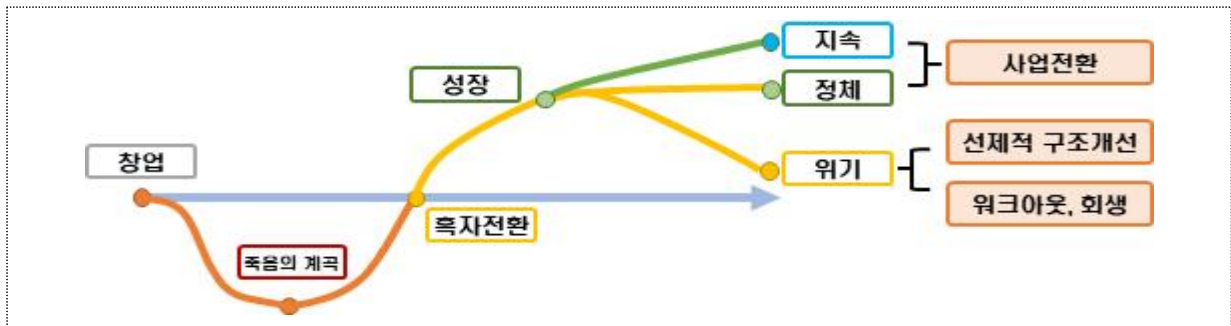
- **(위기대응)** 위기탈출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선별을 강화하여 성장회복 및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위기 유형별 종합·맞춤형 지원

2. 현 재도약 정책

□ 재도약 정책 개요

- 기업이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정체 위기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재도약 할 수 있도록 사업전환* 촉진 지원
 - * ①새로운 업종으로 변경, ②업종 추가, ③신사업 추가(신사업 분야에서 新제품·서비스 도입)
- 성장 하락 또는 재무 위기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선제적 구조개선과 워크아웃, 회생 등을 지원

【기업 성장 경로별 정책현황】



□ 세부 정책내용

- **(구조개선)** 일시적 재무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지원을 통해 조기 정상화를 도모
 - 금융권(기업대출 주요은행 11곳)과 재무 위기징후 기업을 공동 발굴하여 경영개선계획 수립과 정책·민간 금융 지원 등 유동성 공급
 - 회생기업 재도약패키지형 금융지원('19),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도입·확대('21, '24) 등 추진
 - 최근 5년간 2,320개사에 5,800억원의 구조개선자금을 지원, 지원 전 대비 지원 후 2년차에 매출은 26%, 영업이익률 2.4%p 증가
 - * 미수혜기업 대비 수혜기업이 매출액 34.5%p ↑, 영업이익률 8.0%p ↑
- **(워크아웃, 회생)** 경영위기 기업의 원활한 회생·재기를 위한 컨설팅 제공
 - 구조개선, 사업정리 등 진로 제시와 워크아웃·회생 진행 자문·비용 지원

- '21~'25년까지 2,427개사에 컨설팅 제공, 최근 3년간 지원기업의 회생인가율은 68%로 법원 평균 회생인가율(34%)의 2배 상회
- **(사업전환)** 경영환경 변화로 성장통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업종·제품·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영활동을 지원
 - 사업전환 희망기업의 구조 진단 및 전환계획 수립을 지원하고, 전환 승인기업에 대해 전용 자금 및 특례 지원, 연계사업 우대
 - 그간 전환계획 이행기간 연장^{3→5년}(21), 신사업 진출 전환범위 추가(23), 공동사업전환 도입(24), 도약 프로그램 신설(25) 등 추진
 - '21~'25년까지 2,212개사에 1.3조원의 전환자금을 지원, 최근 5년간 전환 종료기업의 전환 전 대비 평균 매출은 49%, 고용 36% 증가

□ 문제점 및 개선방향

- **(위기대응 체계)** 성장 정체, 재무관리 위기 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신청에 의한 사후적 지원 및 개별기업 단위 위기 대응
 - 용자기업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*을 운영하여 사전 발굴 중이나, 징후 탐색 대상이 일부에 불과하고 지역·산업별 위기대응 부재
 - * 중진공에서 자금 지원기업(6만개)의 재무·금융·대표자 신용도를 종합해 4개 등급(정상-주의-예비경보-경보) 분류, 구조개선 대상 발굴 지원
 - 사업전환, 구조개선 등 관련 3개 센터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종합적 지원 체계가 미흡

구분	사업전환지원센터	재도전지원센터	위기지원센터(TP)
운영	중진공(34개)	중진공(19개)	테크노파크(12개)
역할	•사업전환 추진기업 상담·안내 •계획수립 지원, 타당성평가, 사업전환자금 연계지원 등	•재창업, 경영위기기업 종합 상담 •재창업, 구조개선전용자금 용자, 컨설팅, 회생 등 원스톱 지원	•비수도권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징후 상시 모니터링 •주의·심각기업 긴급 처방 지원

⇒ 위기 장기화 전 징후기업의 조기 탐색·알림 등 선제 대응과 유형별 맞춤 진단·컨설팅 등 통합 지원체계 구축

- **(구조개선)** 일시적 재무 위기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시중은행과 함께 자금을 공급하고 있으나, 기업 채무부담 완화 지원책 부재
- 정책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의 선별 지원 필요

⇒ 금융기관의 **채무조정 유도**와 **유동성 지원** 협력방안을 강구하고, 위기기업의 연명 조치가 되지 않도록 **지원대상 선별 강화**

- **(회생)** 공개절차에 따른 '낙인효과'로 거래처 이탈, 장시간 소요

⇒ **법원과 협업 확대**로 **Pre-ARS*** 신청 유도 및 채권자와 **협상 지원**, 협상 실패시 **회생 자문·대행** 등 제도 접근성 제고

* (Pre-**A**utonomous **R**estructuring **S**upport) 기업이 회생절차 신청 전 법원의 비공개 조정절차를 이용해 주요 채권자들과 협상하는 **예방적 자율구조조정**

- **(사업전환)** 성장 전환과 지속화를 위한 지원수단 및 전환분야 집중이 부족하고, 개별기업 전환 대비 대·중소 공동사업전환이 미미

- 지원 정책이 컨설팅, **유자 중심**으로 되어, 성공적인 이행과 전환 성공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 뒷받침 부족

- 산업구조 변화에 **효율적 대응**과 **산업 경쟁력 강화**를 위해 공급망 참여기업의 **공동 사업전환 활성화** 필요

* 대기업(앵커기업)과 다수의 협력업체의 공동 사업전환 지원으로 공급망 전체를 피벗

- **제한적 사업전환 기준***으로 운영되어, 분사·자회사 등 다양한 기업 확장 유형, 생산공정·구조 등의 **변화·혁신 활동** 등 반영 미흡

* 단일기업의 업종전환·추가, 최종산출물(매출·고용)의 변화 등만 사업전환으로 인정

⇒ **성장 유망분야 전환** 및 **정책 수단**을 강화하는 한편, 대·중소 동반 사업전환 활성화 등 **적극적 사업전환(제2의 창업) 추진**을 유도

Ⅲ. 목표 및 추진전략

목표

위기기업의 **선제적 발굴·맞춤지원**으로 재도약 생태계 구축

방향

조기경보 지원체계 구축으로 위기를 **선제적으로 대응**하고,
재무 **구조개선 지원 강화** 및 유망 분야 **사업전환 촉진**

전략1

위기 조기경보 및 위기상황 종합진단 등 선제적 대응

- 1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 시스템 구축 추진
- 2 위기상황 종합 진단 및 맞춤 지원

전략2

재무 위기기업 구조개선 및 회생 지원 강화

- 1 구조개선 대상 선별 및 민관협력 지원 강화
- 2 회생절차 진입 전·후 지원 강화

전략3

성장 위기기업 유망사업 전환 촉진 및 성공 지원

- 1 유망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촉진
- 2 사업전환 성공 5종 정책패키지 지원
- 3 대·중소 동반 사업전환 활성화
- 4 이행 성과별 차등 지원 및 우수기업 성장 가속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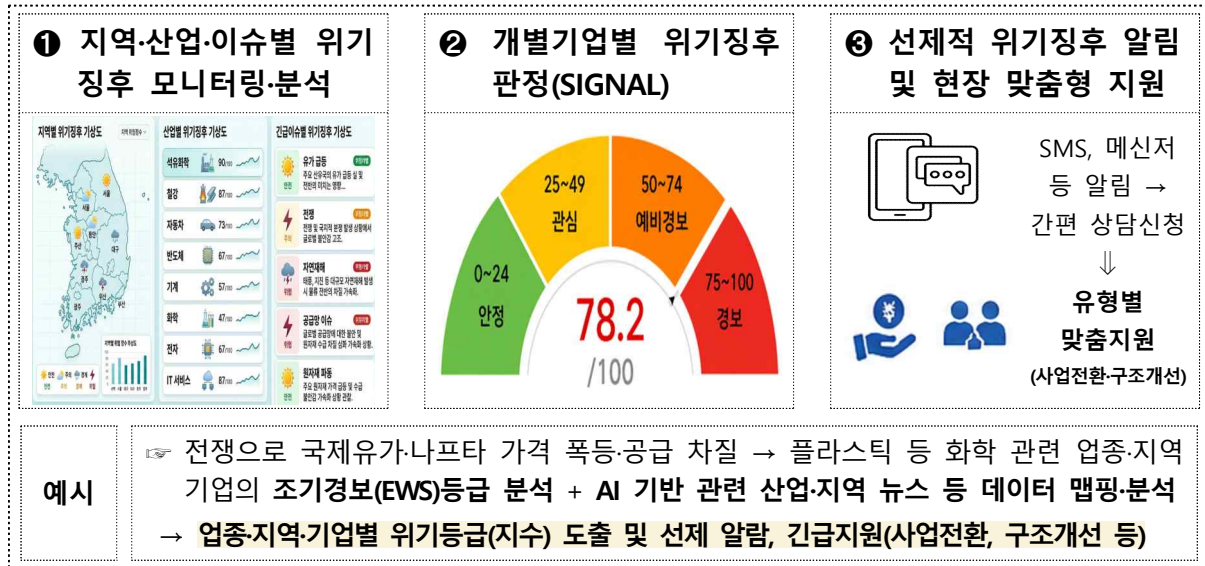
전략4

재도약을 위한 제도·인프라 뒷받침

- 1 사업전환 유형 및 범위 확대
- 2 규제 완화 및 인수합병 등 활성화

- **(운영)** 위기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, 산업·지역·이슈별 위기를 분석 (월별정기, 긴급이슈수시)하여 위기징후 기업에 사전 경보알림 및 맞춤 지원

【위기선제대응 체계 운영(안)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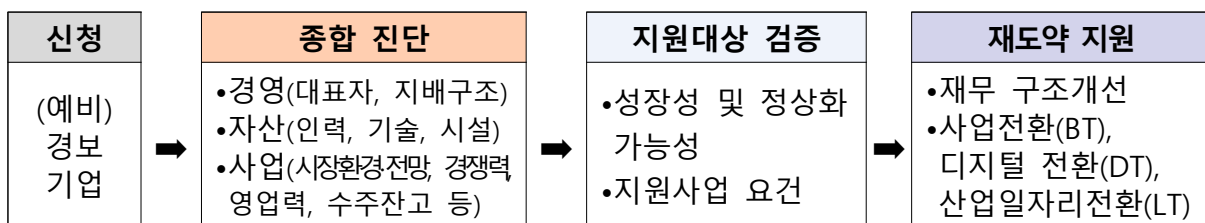


- ① 조기경보시스템(EWS)의 일일 동향과 AI 에이전트의 분석을 더해 위기징후 예측 알고리즘 도출 → 위기 지원 및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
- ② 분석을 기반으로 기업별 위기징후지수*(SIGNAL)를 도출·판정하고, 위기징후 기업에 '위기경보알림톡' 서비스 제공(메신저, SMS)
 - * 정상, 주의, 예비경보, 경보로 4등급 판정 → 경보기업 대상 위기관리 실시
- ③ 위기알림·상담을 통해 기업위기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, 현장 밀착 진단 및 맞춤형 지원(구조개선, 사업전환)까지 선제적·능동적 대응

② 위기상황 종합 진단 및 맞춤 지원

- **(진단·검증)** 위기경보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진단 및 검증을 통해 정상화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고 유형별 맞춤 사업 지원

【재도약 진단·검증 체계】



○ **(맞춤 지원)** 진단결과에 따라 경영 정상화와 성장 전환을 위한 구조개선 또는 사업전환을 컨설팅부터 용자, R&D 등 후속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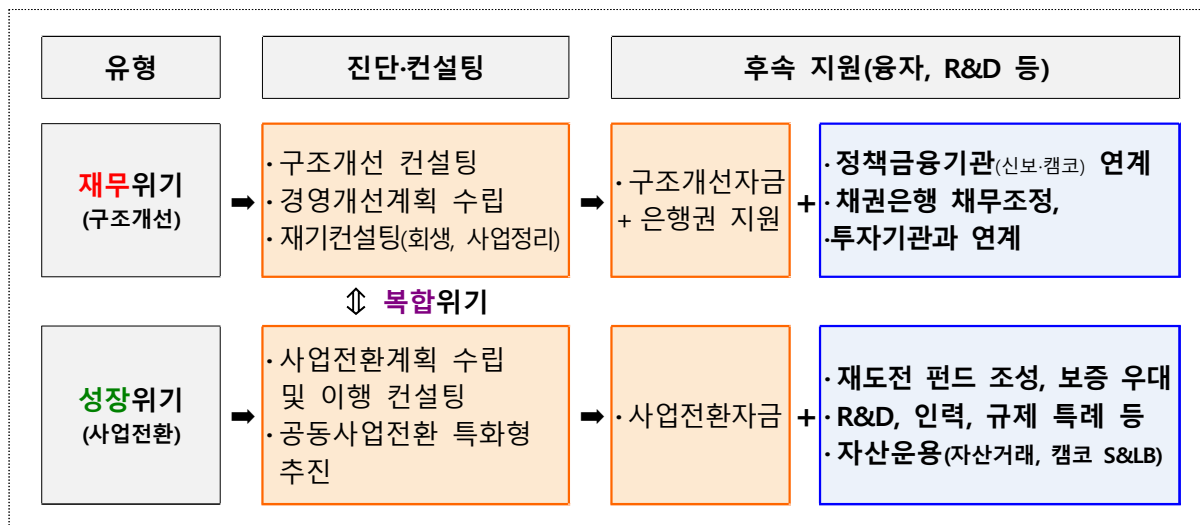
- **(구조개선)** 경영애로 분석, 재무실사 및 기업가치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 검토 후 경영개선 방안 도출 → 개선계획 수립 지원

- **(사업전환)** 자체 전환계획 수립 애로기업 대상, 전문가의 기업 맞춤형 전환로드맵 수립* 지원과 전환기간(3년) 동안 지속 컨설팅**

* 신규 진출 시장분석, BM, 자금·기술·인력 조달방안 등 세부 이행계획 수립 지원

** 단년도 컨설팅 지원 → 3년간 기술·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가 계획 이행을 뒷받침

【 위기 유형별 지원 프로세스(안) 】



○ **(통합 지원)** 위기대응 관련 3개 센터를 「재도약지원센터」로 통합·연계*하여, 유형별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<사업전환법 개정>

* (통합) 중진공 사업전환센터^{34개} + 재도전지원센터^{19개} ⇔ (연계) TP 위기지원센터^{12개}

- 통합센터는 전국 단위를, 위기지원센터는 비수도권 밀집지역을 모니터링하고, 업종과 지역 대상을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

- 정책금융기관*(센터)과 위기지원 통합상담 대응체계**를 구축하여 기관별 지원사업과 연계

* (신보) 기업밸류업센터^{8개} ⇔ (중진공) 재도약지원센터 ⇔ (캠코)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^{1개}

** 각 기관 센터 방문기업에 적합한 기관별 지원사업 안내·상담 매뉴얼 제작, 활용 등

2 재무 위기기업 구조개선 및 회생 지원 강화

1 구조개선 대상 선별 및 민관협력 지원 강화

- **(선별 및 지원강화)** 위기경보알림시스템으로 포착한 재무위기 기업 중 지원대상 선별을 위해 '정상화 요인*'을 반영한 심사기준 고도화
 - * ①영업현금흐름, ②영업이익률, ③금융비용부담률, ④총자본 투자효율 등
- 위기 기업의 **정상화·성장 가능성** 중심으로 평가(비중 80 → 100%)
- 경영개선계획 이행실적이 우수하고, **정상화 가능성이 확인된**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평가절차 간소화, 용자 우대 등 추진
- **(채무조정 유도)** 금융권 대상 '상생금융지수' 평가 항목 내 '중소기업 채무조정* 비중'을 신설^{26.하~}하여 상생금융 참여 유도
 - * 원리금 감면, 출자전환, 상환 유예, 만기연장, 부실채권 소각·매각 등
- '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' **협약은행(11곳)**과 **채권보유 형태에 따라 사전·후 구조개선-신속금융*** 연계 지원
 - * 주채권은행이 신용평가 B등급 기업(단기적 유동성 위기)에 만기연장, 금리인하 등 지원

【 중진공-협약은행 간 연계지원(안) 】

지원대상	지원내용
■ (사전 연계) 협약은행 단일채무 기업	▶ 중진공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(신규 대출, 만기연장 등) 지원 후, 협약은행 신속 금융* 지원
■ (사후 연계) 협약은행 다중채무 기업	▶ 주채권은행 '신속금융' 지원 후 추천한 경영정상화 추진기업을 중진공 후속 연계 지원

- **(투자연계 지원)** 기업 구조개선 투자기관*을 '구조개선 파트너스'로 지정,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위기징후 기업을 선별 후 先투자 後용자 지원
 - * 한국벤처투자 재도전펀드('26) 운용 벤처투자조합, 연합자산관리(주) 등
- 파트너스 추천기업의 자금 지원 및 만기연장 등 상환 부담 조정,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패키지로 우대 지원

② 회생절차 진입 전·후 지원 강화

- **(진입 전)** 법원과 비공개방식인 회생 전 자율구조조정 제도(Pre-ARS) 이용 활성화 및 채무조정 협상 컨설팅 지원으로 성공률 제고
 - Pre-ARS 적합성 검토부터 채무조정안 수립*, 법원·채권자 대응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조력 등 채무조정 협상 지원
 - * 계속기업 가능성 검토, 자산 매각 및 자구노력을 통한 채무변제 계획 등 수립

【채무조정 협상지원 개요】

▶ 지원조건: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

※ 단, 컨설팅 범위 및 기업부채, 자산규모에 따라 한도액/지원비율 차등 적용

▶ 지원내용: 회생절차 진행별 구비서류 작성, 자문 및 조력 지원

- **(현행)** 서류작성: 회생신청서, 심문답변서, 채권·채무자 목록, 시부인표, 회생계획안 등
- **(추가)** 자문·조력: 회계·세무 자문/ 회생관련 전반적인 조력 (채권자+법원 연결 역할)

- 회생 컨설팅 지원 대상을 회생 신청기업에서 제휴법원(14곳)의 Pre-ARS, 하이브리드* 구조조정 신청기업 중 법원 추천기업까지 확대

* 워크아웃과 회생을 결합하여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 상황에서 채권자협의회를 추진
→ (성공) 워크아웃 성공, 회생 취하 or (실패) 회생 개시

- **(진입 후)** 구조개선자금 지원대상을 낙인효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회생인가 기업*까지 확대하여 정상화 도모

* (기존)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 → (개선) 기존대상 + 회생계획 인가 기업
↳ 회생이행계획 정상 추진기업에 한해, 소액 지원 후 이행정도에 따라 추가 지원

-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공급 및 판로지원(계약 이행보증) 등을 패키지로 협업 지원

【회생 협업 금융지원】

지원기관	지 원 내 용
중진공	▶구조개선전용자금 / 회생컨설팅 별도 지원
자산관리공사(캠코)	▶DIP금융 전문회사(캠코기업지원금융(주)) 융자 및 투자
서울보증보험	▶이행보증 및 인허가보증 특별공급(기업당 5억원)

3

성장 위기기업 유망사업 전환 촉진 및 성공 지원

- ◆ 신사업 분야 전환 유도 → 패키지 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 확보
- ◆ 공급망 기업들의 공동사업 전환을 촉진하여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
- ◆ 전환 성과 우수기업을 스케일업 사업과 연계하여 성장 가속화

1 유망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촉진

- (방향) 현행 6개 신사업 분야에 5극 3특 성장엔진^(추후 확장) 및 지역주력 산업* 분야를 추가 우대하여 유망 신사업**으로 전환 유도

*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 및 공백을 보완하여 선정

** 국가전략기술, ICT융합기술 등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승인율(25. 59%)을 **70%까지 확대**

【 지역주력산업 분야(예시) 】

중부권	호남권	대경권	동남권
·대전: 첨단 국방로봇 등 ·세종: 첨단 반도체 활용 실증 ·충북: 반도체 첨단 패키징 ·충남: 첨단 모빌리티 부품 등	·광주: 모빌리티 융합 전장, 바이오 융합 메디테크 ·전남: 친환경 저탄소 소재부품, 첨단 조선 해양기자재	·대구: 스마트 부품 가공 ·경북: 지능형 디지털 부품	·부산: 첨단기계 부품 ·울산: 친환경 자동차 부품 ·충남: 첨단 화학 소재 ·경남: 지능형 자율제조
강원		전북	
·바이오메디 활성소재 ·첨단세라믹 융합소재부품		·특수 목적용 모빌리티부품 ·기능성 바이오 헬스소재	

- (추진) 사업전환 계획수립-승인-이행 등 전 과정 지원체계를 개편
 - (계획수립) 유망 신사업 분야 전환계획 컨설팅 강화 및 AI를 활용하여 성장분야 사업전환 경로 제시
 - * 신산업 분야 전문 컨설턴트(AI, 반도체, 휴머노이드 등) 확대(386명 → 600명 내외)
 - ** 사업전환 특화 AI모델^(26 개발완료)을 통해 유망품목, 성공가능성, 예상 성과 등 제시
 - (전환승인) 신사업 분야별 '전문심사제' 운영과 성장성 중심으로 평가하고, 해당 분야 우선 승인 확대
 - (이행성과) 유망분야 선도기업을 선정, 스케일업 사업으로 연계 지원

② 사업전환 성공 5종 정책패키지 지원

- 성공적 사업전환을 위해 ①기술 → ②인력 → ③제조 → ④금융 → ⑤판로 등 전환 실행 단계별 수요에 맞춘 이어달리기식 지원

구분	주요 내용
①기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신사업 전환 기술개발(R&D) 사업 추진 <과기정통부 협조> ▶ 신사업 분야 진출 전환 승인기업의 전환업종 핵심 기술 개발 및 보유 기술 고도화 지원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전환기업 AI 문제해결형(PBL) 훈련 지원 등 <노동부 협조> (사업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 및 인력 수요 지원) ▶ AI훈련코치가 사업전환기업의 AX 수준과 훈련 수요를 진단해, 훈련 로드맵 수립 및 AI PBL 훈련 등 지원 * 사업전환기업 대상 진단·훈련 수요 전수 조사 → 진단·훈련 수시 지원 ▶ 사업전환기업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지원 우대 *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전환기업(약 40%가 구축)을 대상으로, 스마트제조 전문인력 지원규모 우대(예: 기업당 최대 4명 → 6명)
③제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전환 기업의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우대 ▶ 사업전환계획 승인 제조기업에 로봇 자동화 시스템, 공정설계 컨설팅, 안전 컨설팅 등 패키지 지원 (가점 신설) * 기업당 최대 2.5억원 지원
④금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사업전환 정책자금 및 보증 우대 등 <기획처 협조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용자 ▶ 전환성과 창출 및 자구 노력·상환 능력 등에 따라 한도 및 금리 우대 등 정책자금 지원 강화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증 ▶ 신사업 진출 등 전환 승인기업의 설비 도입, M&A 등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우대 지원 강화 투자 ▶ 총 1조원 규모의 '재도전 펀드'를 조성('26~'30), 성장가능성 있는 사업전환기업 등에 투자 유도 * 투자유치 희망기업 정보 제공 → 사업전환기업, 구조개선자금 수혜기업, 재창업기업 등 주목적투자대상 집중 투자(펀드 결성액 60% 이상)
⑤판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해외 수요에 기반한 사업전환 추진 시 수출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집중 지원 * 해외인증,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등 연계

③ 대·중소 동반 사업전환 활성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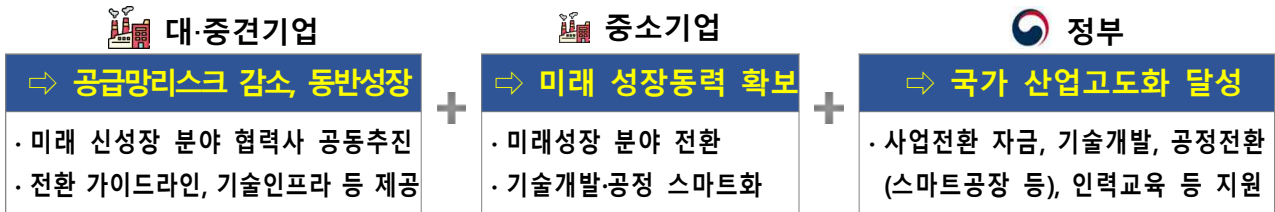
- **(추진방향)** 공급망 상위기업(대·중견)의 신사업 진출계획과 연계하여 전·후방 가치사슬이 함께 움직이는 공동사업전환 추진
 - 공급망 리스크 분담 및 산업고도화 등 상생 시너지(Win-Win) 창출

【사례】 산업 공급망 내 공동사업전환 지원 수요

현장 의견

- 하청 중소기업 특성상 원청(대·중견)과 공정부터 기술 규격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긴밀하게 연결되어, 원청기업과의 명확한 방향성 공유없이 기업 단독으로 전환하는 것은 큰 리스크와 부담 동반(구매조건 미부합 → 투자 실패 우려)

【 동반 사업전환 협력체계 】



- **(수요발굴)** 대·중소협력재단-대기업과 공급망 단위 전환이 필요한 공동사업 전환 분야를 시급성·유망성 등을 고려하여 발굴·선정
 - 선정된 전환 분야와 관련한 개별연구회(기업·협단체 등)* 운영을 통해, 공동전환 계획, 기술검증(PoC) 과제 등 사전 검토 및 구체화
- * 공모를 통해 대·중소기업 및 유관 협·단체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를 선정하여, 전환 컨설팅, 워킹그룹 활동 등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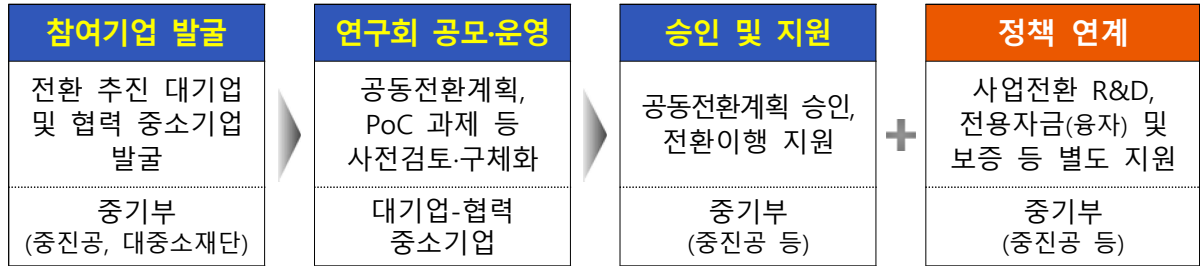
【 업종별 동반 사업전환(예시) 】

구 분	주요이슈	전환예시
피지컬 AI·로봇	▶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시대 및 산업 생태계 형성	•자동차 변속기→로봇 감속기, 모터→로봇 액추에이터, 자동차 ECU→로봇 제어기
자동차	▶내연기관차에서 전기·수소차로 전환	•엔진→모터, 연료→열관리시스템, 배기→배터리 구조체, 변속기→감속기
조선	▶스마트 조선소, 자율운항 선박 전환	•강재 가공, 용접 중심→디지털 설계, AI 기반 생산, 항해 장비→자율운항 시스템
에너지	▶화석연료 발전에서 ESS 중심 전력망으로 전환	•발전 기자재→전력변환장치(PCS), 에너지 관리시스템(EMS)

- **(운영체계)** 대기업과 함께 전환에 참여할 (예비)협력사를 발굴·매칭하여, 공동전환 계획수립부터 이행까지 일괄 지원

- (대기업) 협력사 발굴, 신사업 진출 로드맵 및 기술 인프라* 등 제공
- * 기술·공정 표준, 제품 요구스펙, 기술멘토 파견, 시험장비(연구소) 제공 등
- (협력사) 인력·설비 투자, 기술개발 및 제품화 등 전환 이행
- (중기부) 전환계획 승인, 정책 연계로 리스크 없는 공동전환 지원

【 동반 사업전환 운영 절차 】



○ (이행지원) 공동사업전환 참여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우대·연계 지원 추진

- (대기업) 사업전환 추진·이행 시, 동반성장지수평가 실적으로 인정
- * 평가지표 중 '공평한 성과의 배분' 항목에 과제당 최대 0.1점 반영
- (협력사) 전환 추진·이행 컨설팅, 시제품 제작, 특허·인증 등의 사업화를 지원하고, R&D·자금 등 정책 연계 지원*
- * ①(R&D-자금) 사업전환 R&D, 사업전환 전용 용자(최대 100억원) 등
- ②(공동행위인가) 공동전환 BM 수립 시 담합행위 여부 등 기초검토 → 공동전환승인 (중기부)과 공동행위인가(공정위)를 병행
- ③(동반성장 네트워크론) 납품계약을 근거로 단기 생산자금 조기지원(매출채권 양수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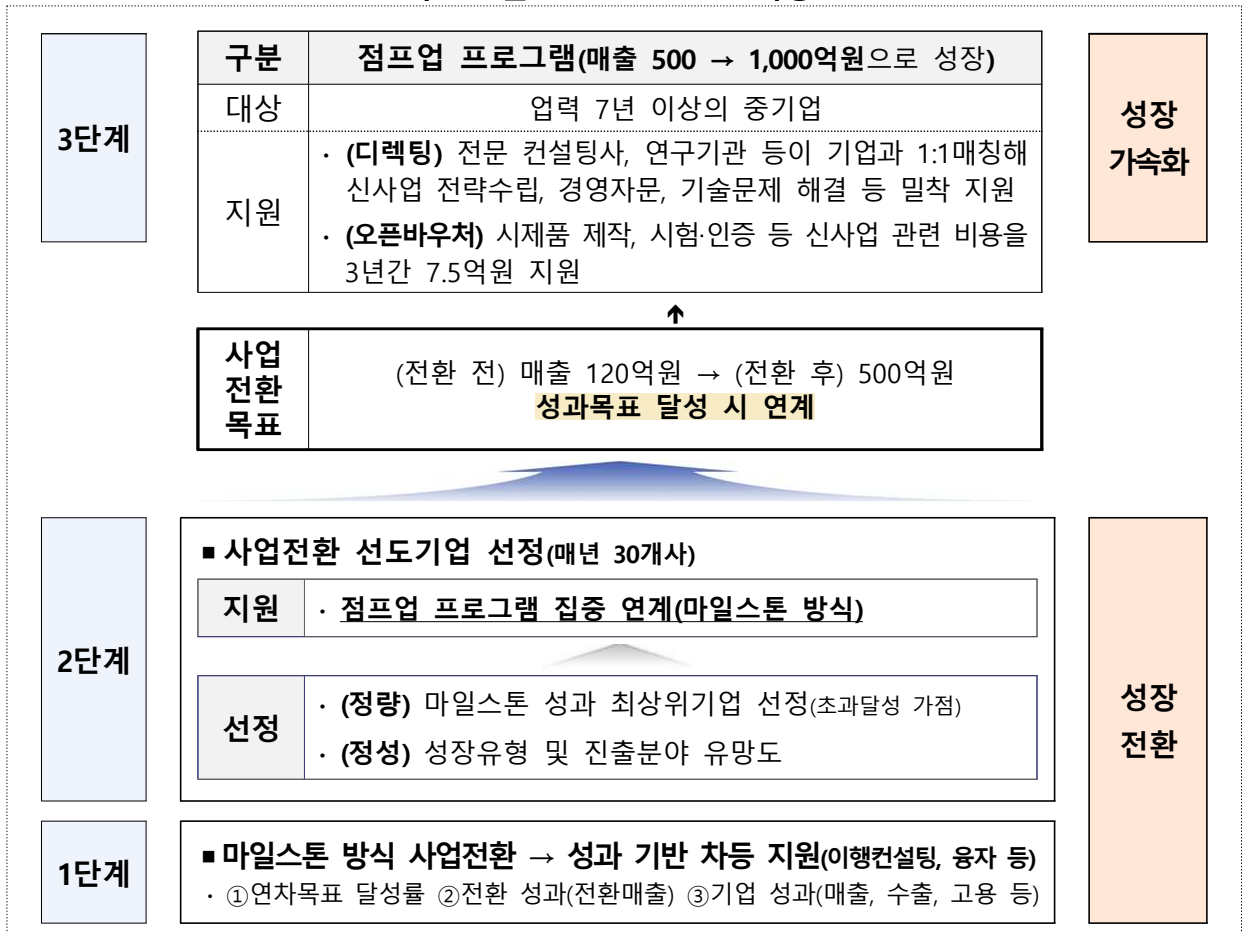
【 전환 모델 (예시) 】

구 분	핵심 방식	대·중견기업	정부
①수요제시형	▶미래 전환 품목 제시 후 기업 모집	▶수요품목 및 기술요건 제시 후보기업 모집추천	▶공동계획 일괄승인 ▶사업화 등 지원 (R&D-자금 등) ▶협단체·지역TP 등 협업
②공급망 체질 개선형	▶기존 협력기업의 피보팅 (Pivoting) 지원	▶전환분야 협력사 모집, 기술 멘토링 등 지원	
③지역거점형	▶협력사 밀집 지역별 공동전환 프로젝트	▶공장·계열사 실증 수요 제공	

4 이행 성과별 차등 지원 및 우수기업 성장 가속화

- **(방향)** 사업전환 계획의 이행 성공·실패 관리방식에서 연차별 목표 달성도,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'마일스톤' 방식 도입*
 - * (기존) 3년 이행기간 종료 후 전환 매출·고용비중 조사 → **(개편)** 전환매출 비중 외 총매출 성장 등 연차별 목표 부여후 달성여부, 성과조사 ⇒ 이행과정 추가 컨설팅, 융자 지원
 - 사업전환 성공기업 중 고성장 궤도에 오른 기업은 지속 견인할 후속 스케일업을 지원
- **(추진)** 마일스톤 성과 달성 및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'사업전환 선도기업'을 선정(연 30개 내외)하여 집중 지원
 - 선정된 선도기업은 점프업 프로그램*과 연계하여 성장사다리 회복을 위한 도약 지원
 - * 성장사다리 회복을 위해 유망 중소기업에 디렉팅, 오픈바우처, 네트워킹 등을 3년간 집중 지원

【 사업전환-JUMPUP 연계방안 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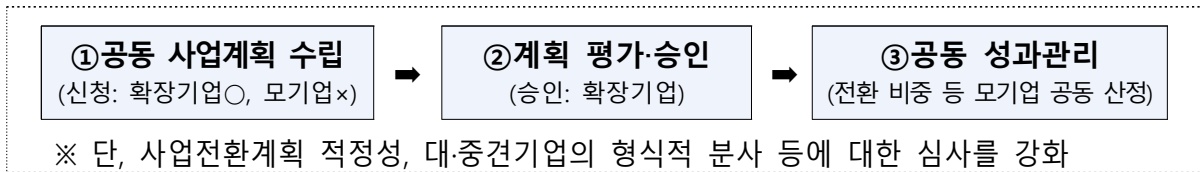


4 재도약을 위한 제도·인프라 뒷받침

1 사업전환 유형 및 범위 확대

- **(유형 확대)** 기업의 업종 추가 또는 전환 외 분사·조인트벤처, 인수 합병 등을 통한 사업전환 방식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* <사업전환법 개정>

* 기존: 단독형, 공동형(2개 이상 협력기업) → 확대: 확장형(분사·자회사·JV, M&A)



【사례】 창업 & 사업전환 지원 사각지대 발생

현장 의견

- A사는 재활용 원료 기반 친환경 분야의 신사업 추진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
- 창업(모회사 지분 50%)과 사업전환(단일기업 내 전환요건(매출·고용 30%) 충족) 지원대상에 모두 미해당하여 지원 불가

- **(범위 확대)** 현행 최종산출물 중심의 사업전환 체계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준비단계의 혁신활동까지 전환 범위에 포함
 - 산업구조 전환은 산업 생태계 내 생산구조·가치사슬 전반의 변화가 핵심
 - 특히 유망 신사업 분야 진출 전환기업에게는 제조 DX·AX·GX, 공급망 재편 등 전환 전단계의 혁신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반

【 미래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혁신활동(예시) 】

사업전환 추진내용	필수적 혁신활동
▶(기존) 자동차 엔진용 부품 → (전환) 친환경차 배터리팩 하우징	▶ [DX·AX] MES 도입, AI 기반 용접 품질검사 도입
▶(기존) 석유화학수지 플라스틱 사출 → (전환) 재생원료 수지 패키징	▶ [GX] 원·연료 무탄소공정 구축 및 폐자원 활용 필요
▶(기존) 범용 유압밸브 → (전환) 수소 에너지 제어밸브	▶ [GVC] 특수합금 확보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계약

- 산업 대전환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의 혁신활동까지 지원하는 사업전환 체계개편(범위 확대) 연구 추진

➔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업전환법을 개정하여 혁신활동 근거 마련

② 규제 완화 및 인수합병 등 활성화

○ **(규제 완화)** 사업전환 기업의 운용 인력, 설비 투자 등 경영전략 이행 지원을 위한 제도적 제약 완화

- **(인력 확보)** 신사업 전환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장기 확보를 위해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따른 외국인력(E-7)의 체류기간 연장 <법무부 협조>

* (현행) 특정활동(E-7) 직종 종사자의 체류기간 상한은 3년 이하, 지역특화발전지구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종사자는 5년 → (개선) 사업전환 승인기업 종사자도 5년

- **(지방투자)** 사업전환 기업이 사업장 일부 축소 후 지방에 신·증설 투자 시에 지방투자보조금 수혜 예외 신설 추진 <산업부 협조>

* (현행) 지방에 사업장 신·증설 시 보조금 신청 요건 중 '기존 사업장 유지' 충족 → (개선) 사업전환기업의 경우, 기존 사업장 축소 인정(단, 신규투자 > 축소규모)

○ **(인수합병)** 사업전환형 M&A 활성화를 위해 민간 중개기관*의 정보 및 전문성을 결합하여 민간 협업형 M&A 지원 체계 구축

* 인수합병 전문 중개기관, 회계·법무법인, 특허·기술법인 등

【 민관협업형 사업전환 M&A 지원체계 】

구분	민간 중개기관	정책 지원
발굴 및 매칭	·우량 매도·매수기업 DB 제공, 매칭 중재	·정보 제공 비용, M&A 매칭데이 등 운영
실사 및 평가	·재무·법률·기술 실사 및 가치평가	·실사 및 평가 비용 지원(50~70%)
계약 및 조달	·자금조달구조 및 지분인수 방식 설계	·인수금융 등 연계

○ **(자산거래)** 사업전환 또는 구조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산의 완전 매각 또는 매각 후 임대 등의 방식으로 유동성 지원

【 유형별 자산운용 지원(안) 】

유형	연계사업
▶(사업전환) 기존 업종 축소·유지 ▶(구조개선) 유휴설비 축소	기존 자산 활용 → 매각 후 재임대(Sale & Lease Back, 캠프)
▶(사업전환) 기존 업종 폐지	기존 자산 불용 → 유휴자산 매각 지원(자산거래중개장터, 증진공)

- (매각후 재임대) 캠코와 협업을 통해 사업전환 S&LB* 유형을 신설하여 전환 초기 유동성 공급, 재매입 시 브릿지 금융** 지원

* 일반 S&LB 대비 임대료율 하향, 자산 재매입시 가격 부담 완화(매입 시 가격 고정으로 시세상승 부담 등 완화) 등 우대

** 기업이 S&LB 자산 임대기간 종료 후 자산재매입 비용 등을 중진공 용자(시설·운전) 지원

- (자산거래 활성화) 온비드^{캠코}, 한국기계거래소 등 자산 플랫폼과 감정가, 성능 및 인증 등 실시간 정보를 연계하고 전용관 신설

【 자산거래·유동화 플랫폼 연계(안) 】

플랫폼	온비드(캠코)	자산거래중개장터 (중진공)	한국기계거래소
주요기능	•국공유자산, 압류자산 공매	•중소기업 유휴설비 거래	•기계 등 감정, 경매
연계방안	① 플랫폼 간 실시간 매물정보 동기화(등록자정보, 물건정보 등) ② 상세 감정가격, 성능정보(기계거래소) 연동 및 인증제도 등 추진 ③ 각 플랫폼별로 「사업전환 전용관」 신설 → 전환기업 판매설비 중점 홍보		

V. 향후 추진일정

추진과제		소관부처	추진일정
[전략 1] 위기 조기 경보 및 위기상황 종합진단 등 선제적 대응			
① AI 기반 중소기업 위기경보알림시스템 구축 추진			
①	시스템 구축 예산 마련 후 개발 및 구축 추진 (신용평가사 데이터 분석 및 모델 수립 포함)	중기부·기획처	'27.1~12
② 위기상황 종합 진단 및 맞춤 지원			
②	재도약지원센터 설치 법제화 지원센터 통합 운영 및 진단·지원	중기부·기획처	~'26.12 '27.상~
[전략 2] 재무 위기기업 구조개선 및 회생 지원 강화			
① 구조개선 대상 선별 및 민관협력 지원 강화			
③	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심사기준 개편	중기부	~26.12
④	구조개선 이행 우수기업 지원 강화	중기부·기획처	'27.1 ~
⑤	금융권 상생금융지수 평가	중기부·금융위, 동반위	'26.하~
⑥	협약은행 및 투자기관과 구조개선 연계 지원	중기부·법원	'27.1 ~
② 회생절차 진입 전·후 지원 강화			
⑦	회생 신청기업 채무조정 협상 지원	중기부·법원	'26.하~
⑧	회생기업 금융 및 판로 등 패키지 지원	중기부	'26.하~
[전략 3] 성장 위기기업 유망사업 전환 촉진 및 성공 지원			
① 유망 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촉진			
⑨	신사업 분야 컨설턴트 확충 및 전문심사제 운영	중기부	'27.1 ~
⑩	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승인을 확대	중기부	'27.1 ~
② 사업전환 성공 5종 정책패키지 지원			
⑪	신사업 전환 기술개발사업 추진	중기부 과기정통부	'27.1 ~
⑫	사업전환기업 AI문제해결형(PBL) 훈련 지원 등	중기부·노동부	'27.7 ~

추진과제		소관부처	추진일정
⑬	사업전환기업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우대	중기부	'27.1 ~
⑭	사업전환 자금 지원 강화 및 재도전펀드 활용 투자 유도	중기부·기획처	'27.1 ~
⑯	사업전환기업 수출지원사업 연계	중기부	'27.1 ~
③ 대·중소 동반 사업전환 활성화			
⑰	대기업과 공동사업전환 수요 발굴	중기부	'26.하 ~
⑱	동반 사업전환 재원 마련·시행	중기부·기획처	'27.1 ~
④ 이행 성과별 차등지원 및 우수기업 성장 가속화			
⑲	사업전환기업 마일스톤 방식 도입	중기부	'27.1 ~
⑳	사업전환 선도기업 선정(연 30개 내외)	중기부	'27.1 ~
㉑	선정 선도기업 점프업 프로그램 연계 지원	중기부	'28.1 ~
[전략 4] 재도약을 위한 제도·인프라 뒷받침			
① 사업전환 유형 및 범위 확대			
㉒	사업전환 범위 확대를 위한 체계개편 연구 추진	중기부	'27.상 ~
㉓	사업전환 유형 및 범위 확대 법제화	중기부	'27.1 ~12
② 규제 완화 및 인수합병 활성화			
㉔	신사업 전환기업 전문 외국인력 체류기간 확대	중기부·법무부	'27.1 ~
㉕	사업전환기업 지방투자보조금 수혜요건 완화 추진	중기부·산업부	'27.1 ~
㉖	민관협업 사업전환 M&A 활성화	중기부	'27.상 ~
㉗	자산 매각후 재임대 지원 및 자산거래 활성화	중기부	'27.1 ~